

尹-李, '의료개혁' 공감... "민생, 가장 중요한 현안"

영수회담 135분 진행... 합의문 없어
윤 "이태원특별법 무조건 반대 아냐"
종종 만나기로... 여당 3자 회동 가능
민생지원금 "어려운 분 지원" 난색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첫 영수회담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법리 문제가 해소되면 논의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이날 회담에선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양측이 어떤 형식이든 앞으로 종종 만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시스

날 수 있고, 또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가능해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

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

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선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영수회담은 약 135분 만에 종료됐다. 회담은 참석자들의 인사와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이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담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오월정신 헌법 수록 명문화'... 5·18조례 통합

정신계승 기본조례 시의회 통과
11개 관련조례 폐지 1개로 통합

11개로 분산돼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의 내용을 담아 1개로 통합됐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

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13개 조례 중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을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금 등 국기의 조기 계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가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고 통·폐합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

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해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 5·18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 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 지원, 구

묘역의 정명, 안장기준 등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돼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안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위원회에는 5월 단체 추천 4명, 시민사회 추천 4명, 광주시·시의회·교육감·구청장 추천자 등 총 3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김은지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